

누가 우리의 꿈을 조종하는가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올해 6학년 아이가 수학여행 갈 때 입는다고 아디다스 저지를 사달라고 했다. 저지(jersey)는 땀을 쉽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든 운동복이다. “이걸 입고 수학여행 간다고?” 이해가 안 되어서 딸에게 다시 물었다.

“응, 우리 반 애들 다 입었는걸.”

어쩔 수 없이 사서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패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 아디다스 저지를 입고 다녔다.

“그것 봐 내가 뭐라 했어. 다 입었지?”

아이는 스스로 만족하며 승리에 찬 모습을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은 전에 없이 밝았다. 언젠가 읽었던 책이 머리를 헤집고 나왔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어쩔 수 없이 조종당하는 우리들의 현실.

소비의 진실은 20년 동안 브랜드 전쟁의 최전방에서 활동한 저자가 오늘날 마케팅과 광고회사들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심리 분석과 음모들을 낱알이 폭로한 책이다.

특정 기업들이 어떻게 광고 캠페인과 바이러스 마케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로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들 제품에 중독되도록 만드는지. 그리고 특정한 유명 웹사이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두뇌를 재구성해 그들 제품에 대한 소핑과 소비에 몰아매는지 이야기한다. 다양한 심리 실험과 사례를 이용한 두뇌 스캔 결과는 저자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어린 날부터 엄마 손잡고 엄마가 선호하는 메이커에 길들여지고, 친구들의 선호도에 따라 성향이 바뀌는 오늘의 아이들.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나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과연 아이들 몫인지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큰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몇 컷 토크로 보내왔다. 요즘은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현지 상황을 사진 몇 장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사진 속에 아이들 모두 아디다스 저지를 입었다. 팔, 다리 길이에 하얀 줄 두 개가 그어져 있는 운동복.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

때마침 텔레비전 프로에 디자이너 지춘희가 소개했는데 섬세함과 남다른 보스의 기질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며 보았다. 전문인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성장하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돼 그런 성향의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조종하지는 않았을까. 대기업의 마케팅을 통해 자기 회사 제품을 사게 조종하듯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조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보랏빛이 나는 수레국화를 사서 베란다에 뒀더니, 작은 아이가 가까이 와서 “난 꽃을 좋아해”하고 속삭였다. 그 소리를 듣고 큰아이한테 물었다.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큰아이는 말을 못 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즈음이었나 보다. 큰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기 숙제를 내줬다. 그 내일이 되어도 동생처럼 꽃을 좋아한다든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든가, 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이를 조종하려고 했다.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꿈이 뭔지를 강요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사처럼 경쟁심리를 불러일으켜 아이의 의사는 무시하고 어른의 처지에서 아이를 조종하지는 않았는지. 꿈을 설정해 놓고 그 꿈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남이 하나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내 개성을 스스로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종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닐까.

社說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단 내려야

44주년 앞두고 국민열망 높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5·18정신이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길 염원한다.

전문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함축한다.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현재 전문에 명문화된 3·1만세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의 이념, 본질적 가치 규범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폭력적이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항한 국민의 저항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가 풀어야 할 숙제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각 주체가 국민적 요구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

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해 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국가적 인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항쟁 계승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18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헌법전문 수록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의지를 갖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 책임져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자치단체에 떠 넘겨선 안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7월 광주 본원, 제주 본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 시설임에도 정부 운영예산과 인력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 광주 본원이 설립된다. 총 10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 준공했다. 하지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국립으로 승격됐지만 ‘무늬만 국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규 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면서다. 올해 센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10여 명과 16억원으로 연구 결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예산의 절반은 광주시가 직접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국

가폭력 희생자가 많은 만큼, 인력 61명과 연간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현재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등록된 피해자는 약 122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자 뿐 아니라 상당수 광주 시민들은 5월이 되면 공포와 슬픔, 우울과 불안, 죄책감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오월증후군’을 겪는다고 한다. 통상 어떤 큰 사건 뒤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기념일 반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데도 정부는 “국비 부담비를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광주시는 센터 문을 여는 게 급하다고 판단해 결국 예산 절반을 부담했다. 정부가 100% 국비 지원없이 개관하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자체에 떠넘긴 꼴이다.

당장 정부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예산 삭감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국가의 2차 폭력이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국가이니 치유도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보이콧(Boycott)’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맞서 집단이나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을 말한다. 얼핏 보면 영어 합성어쯤으로 짐작될 수 있지만, 보이콧의 어원은 실존 인물이었다. 찰스 커닝엄 보이콧(1832~1897)으로부터 나온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찰스 보이콧은 군 장교로 임관하면서 아일랜드로 가게 된다. 그는 제대 후에도 아일랜드 지역의 한 경작지 지배인으로 토지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다가 메이요(Mayo) 주에서 토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생활을 꾸려나가게 된다.

찰스 보이콧이 아일랜드에 자리 잡은 시기는 기후변화로 감자 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800여만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200여만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의 시대였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도 소작료를 줄여가는 지주들의 횡포는 변함이 없었고, 아일랜드 인들은 단체를 만들어 지주들과 맞서기 시작했다. 특히 1879년 결성된 ‘아일랜드 토지연맹’은 영국 의회를 상대로 소작농의 권리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 사회운동이 찰스 보이콧이 관리하던 토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찰스 보이콧은 아일랜드 토지연맹의 운동에 참여한 소작농들을 강제로 추방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노동을 거부하며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모든 상점에서 찰스 보이콧에게 어떤 물건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를 떠났고, 마을의 우체부들은 그와 관련된 우편

물과 배달물들을 전달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찰스 보이콧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찰스 보이콧은 마을에서 완전히 격리됐고, 그가 관리하던 토지에서는 어떤 농작물도 수확할 수 없었다. 다만, 결말은 다소 씁쓸하다. 격리된 찰스 보이콧은 외부에 도움을 청했다. 신문 기사와 찰스의 서신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아일랜드 치안판사는 경찰과 주둔군을 마을로 보내 그를 탈출시키고 남아있던 농작물까지 모두 거둬간다.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최근 순천대와 목포대, 순천시와 목포시가 모두 참여하는 ‘5자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순천지역에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을 유치할 지역대학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한 전남도의 방침에 순천지역은 일종의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벌써 수차례의 입장 표명을 통해 순천시는 공모 방식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참 의사를, 전남도는 공모 방식에 대한 적합성만을 입이 닳도록 외치고 있다.

물론 순천지역의 보이콧과 전남도와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역, 대학의 상황은 지주와 소작민들의 갈등에 빗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자신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서의 소통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그 누구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씁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시간은 전남도, 순천지역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